

앙 골 라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면적	1,247천 km ²	G D P	1,236억 달러 (2017년)
인구	28.18백만 명 (2017년)	1 인 당 GDP	4,385달러 (2017년)
정치체제	공화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Kwanza (Kz)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166.50 (2017년)

- 아프리카 남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앙골라는 한반도의 5.6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콩고민주공화국 및 콩고공화국, 동쪽으로는 잠비아, 남쪽으로는 나미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과 동시에 독립운동단체였던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과 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합(UNITA) 간에 권력 쟁탈전이 시작되었으며, 1976년 구소련 및 쿠바의 지원을 받은 MPLA의 단독 집권 후 중앙정부(MPLA)-반군(UNITA) 간 내전이 2002년까지 27년 간 지속되었음.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은 제2위 산유국으로 석유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오랜 내전으로 인한 인프라 파괴와 인적자원 부재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아울러 최근의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성장동력이 크게 둔화되었음.
- 2017년 8월 총선 결과 주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수 국방장관이 제3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38년만에 대통령이 바뀌게 되었으나, 여전히 MPLA(앙골라인민해방운동)가 총 유효투표의 61.07%(총 220석중 150석)를 획득하여 여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플러스 경제성장률 회복

- 앙골라는 고유가 지속, 광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001~10년 중 연평균 11.1%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며, 특히 2005~08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8.1%에 달하는 등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부상하였음. 그러나 2013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 및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16년 경제성장률은 저유가와 세계 경기침체 지속의 여파로 석유 부문은 물론 비석유 부문의 성장까지 둔화됨에 따라 -0.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석유 편중적 구조인 앙골라 경제는 저유가 추세 장기화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침체기를 겪었음. 석유 세입 감소는 재정적자 및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에 대응한 앙골라 정부의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한 외환통제가 외국인투자 유입과 교역규모의 격감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초래됨.
- 2017년에는 유가상승을 위한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의 영향으로 1.5%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유가 하락,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 앙골라의 재정수지는 2006~08년 중 고유가에 따른 국영 석유기업의 원유수출 수입(收入) 증가 등에 힘입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원유 생산량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3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음.
- 2016년 재정수지는 저유가에 따른 세수 감소 외에도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 등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GDP 대비 -5.0%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총선 실시비용 지출로 동 비율이 -6.8%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IMF는 앙골라에 대한 2016년도 Article IV Consultation 보고서에서, 앙골라 정부의 2016년 조세수입이 저유가 지속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2% 감소했음에도 공공 부문의 인건비 지출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결과 2010년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 앙골라 외교부는 2018년 1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앙골라의 재정위기를 감안하여 주싱가포르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등 대사관 9개, 주뉴욕 총영사관, 주광저우 총영사관 등 영사관 18개를 폐쇄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6,630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연료보조금 감축, 환자화 가치 폭락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세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전으로 인해 2000년대 초까지 100% 이상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지속하였으나, 이후 오일머니 유입에 따른 유동성 증가, 긴축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2014년에는 7.3%까지 하락하였음.

○ 그러나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연료보조금 감축, 경기침체로 인한 환자화 가치 폭락*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 2016년 상반기 확장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에 32.4%로 급등하였으며, 2017년에도 환자화 실질가치 하락으로 31%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됨.

* 환자화/미 달러 환율(연간 평균) : 96.52('13) → 98.30('14) → 120.06('15) → 163.66('16) → 166.50('17°)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6.8	4.8	3.0	-0.7	1.5
재정수지 / GDP	-0.3	-6.6	-3.3	-5.0	-6.8
소비자물가상승률	8.8	7.3	10.3	32.4	30.9

자료: IMF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의존적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변동 등 대외적 충격에 취약

- 앙골라는 석유를 생산·수출하는 다수의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석유 부문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국제유가 등락과 세계 원유생산량 증감, 원유의 국제수요 변동 등 대외적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정부는 비석유 부문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를 추진해온 결과 GDP와 조세수입에서 석유 부문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수출에서는 여전히 석유 부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IMF는 앙골라에 대한 2016년도 Article IV Consultation 보고서에서, 석유 부문이 2016년 앙골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GDP의 20.7%, 조세수입의 54.2%, 총수출의 91.0%로 추정하였음.
 - 석유 부문의 GDP 비중과 조세수입 비중은 2012년(45.7% 및 85.0%) 대비 현저하게 낮아졌으나, 총수출 비중은 2012년(96.6%)과 큰 차이가 없어 원유수출액 변동이 여전히 무역수지와 외환보유고를 좌우하고 있음.

□ 내전으로 인한 열악한 인프라와 인적자원 부족이 경제발전 저해

- 27년 간(1975~2002년)의 내전으로 대부분의 사회기반 시설이 파괴되어 종전 후 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도로포장률이 20% 미만으로 여전히 저조하며 철도 운행 및 전력 공급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임.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15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따르면 앙골라의 인프라 수준은 조사대상 144개국 중 141위로 최하위권이며, 특히 전력공급(138위), 도로(139위) 등 부문이 매우 취약함. GCI는 2015/16년, 2016/17년 및 2017/18년 연속으로 앙골라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UN개발계획(UNDP) Human Development Data에 의하면 장기간의 내전으로 인한 교육 인프라 미비로 앙골라의 2014년 기준 평균 교육 이수기간은 5년에 불과하여, 제조업 발전을 위한 숙련 노동인력이 부족함.

나. 성장 잠재력

□ 원유, 천연가스,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앙골라의 원유 매장량은 2016년 말 기준 약 116억 배럴로 세계 17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에 이어 2위 규모임.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도 2016년 약 181만 배럴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 2위이며, 영해(嶺海) 내에서 신규 유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
 - 2016년 5월 Lower Congo Basin 및 Kwanza Basin 지역에서 원유 5.7억 배럴, 천연가스 2.5조 m³, 가스 컨덴세이트(특경질원유) 1.4억 배럴 등의 매장량이 새로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앙골라는 남아공, 보츠와나에 이어 아프리카 제3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 2017년의 다이아몬드 수출액은 상품수출액의 5%인 17.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이외에도 금, 석탄, 구리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광업 부문의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됨.

□ 3각 자유무역지대(TFTA) 출범으로 역내 교역 및 투자 활성화 기대

- 2015년 6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26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3각 자유무역지대(Tripartite Free Trade Area, TFTA)의 창설에 합의하였음.
 - TFTA의 목표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등 3대 지역협력체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것으로, 앙골라는 SADC의 회원국임.
 - TFTA의 역내 인구는 6억 명 이상이며, 역내 GDP 규모는 1조 달러 이상으로 아프리카 전체 GDP의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TFTA는 각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7년 중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이집트와 우간다만이 비준을 완료*하였음. TFTA 발효 시 무역장벽 완화로 현재 10%대 초반에 불과한 역내 교역규모의 증대는 물론 고용창출 및 투자활성화도 기대됨.
 - * TFTA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14개국의 비준이 필요함.

다. 정책성과

□ 국가개발계획 등 경제개발 정책의 추진 성과는 미흡

- 앙골라 정부는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2013~17)을 통해 경제구조 다변화, 사회기반시설 개선, 국내기업 육성 등을 추진한 바 있음.
 - 그러나 국민의 약 70%는 여전히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층이며, 특히 2014년 이후의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정부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만연된 부정부패 등이 경제개발을 저해하여 당초 목표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2017년 10월 앙골라 정부는 로렌수 신임 대통령 주재 첫 내각 정기회의에서 승인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기계획안(2017.10~2018.3)을 발표하였음.
 - 동 계획안은 △민간 부문 활성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생산성 극대화, △수입대체 전략 모색, △비석유 부문 생산 증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촉진, △행정 개혁, △교육 및 보건 부문 투자 확대 및 불평등 완화, △공공지출 운용계획 강화, △세수 확보, △부채상환능력 회복, △통화 및 환율정책 개선, △금융 부문 강화 등 총 13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7년 11월 예산안(2018년)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및 정책 옵션 논의를 위해 앙골라를 방문한 IMF 실사단은 앙골라 경제가 최근 교역조건 개선에 따라 경제성장률 1.1%,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5.2% 등 전년 대비 약간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나 여전히 거시경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앙골라 정부가 중기계획안을 통해 △재정통합, △환율 유연성 확대, △경제다변화 실현 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분석하였음.

* 경제통계, 조세정책,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재정수입 관리, 인플레이션 예측 등을 지원

□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부정부패 등으로 사업환경은 세계 최하위

- 비석유 부문 육성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증대를 위한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은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부정부패로 인해 부진한 수준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앙골라의 사업환경은 조사대상 190개국 중 175위를 차지하며 지난해(182위)보다 7단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부문별로는 특히 자금조달(183위), 대외무역(180위), 계약이행(186위) 등에서 세계 최하위권에 그쳤음.

3. 대외거래

□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품수지 악화 및 경상수지 적자 전환

- 아프리카 제2의 원유생산국인 앙골라는 서비스·소득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로 2013년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수출액 감소로 2014년에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하였음.
- 2015년 이후 외환사용 제한을 위한 수입쿼터제 실시 등으로 상품수입액은 2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저유가 추세 지속에 따른 원유수출액 감소로 상품수출액이 4년 연속 감소하여 2016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3.2%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환자화 가치하락에 따른 상품수입액 증가로 경상수지가 GDP 대비 -5.0%의 적자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됨.

□ 환자화 가치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지속

- 2014년 중반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전환 및 석유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감소*, 환율상승에 따른 환자화 가치 방어를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계속 감소하여, 2017년 말 외환보유고는 2013년 대비 31.6% 감소한 224억 달러로 추정됨.

* 앙골라 FDI 유입액(US\$백만) : 14,346('13) → 16,543('14) → 16,176('15) → 14,364('16)

- 2018년 1월 9일 앙골라 정부는 '2018 경제안정화 정책' 발표를 통해 기존 미 달러화에 페그하는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환율시장 수급에 따른 자율규제 방식으로 환자화 가치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으나, 1월말 기준 환자화는 1달러당 207.4 환자를 기록하면서 중앙은행의 관리변동환율제 시행 후 약 27%의 가치 하락을 기록함.

○ 앙골라 재무부는 2018년 1월 23일 ‘2018 앙골라 경제안정화 정책’ 이행의 일환으로 금년 상반기 20억 달러 규모(이자율 및 만기일 미정)의 유로본드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지난 2015년 11월 앙골라 정부의 유로본드 발행 당시 시장의 저조한 반응 및 앙골라의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로본드는 높은 이자율로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대외차입 증가로 총외채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회복세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및 D.S.R 상승세 완화

○ 쌍둥이 적자 보전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총외채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말 41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44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국제유가 회복세에 따른 명목 GDP 증가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6년 43.2%에서 2017년 36.7%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e
경 상 수 지	8,145	-3,748	-10,273	-3,071	-6,137
경 상 수 지 / G D P	6.5	-3.0	-10.0	-3.2	-5.0
상 품 수 지	41,916	30,590	12,488	14,549	15,288
수 출	68,247	59,170	33,181	27,589	34,784
수 입	26,331	28,580	20,693	13,040	19,496
외 환 보 유 액	32,780	27,735	24,419	22,453	22,414
총 외 채 잔 액	29,471	34,685	36,858	41,415	44,899
총 외 채 잔 액 / G D P	23.6	27.4	35.8	43.2	36.7
D S R	3.5	5.6	8.5	21.4	16.2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로렌수 국방장관, 앙골라 제3대 대통령 취임

- 2017년 8월 23일 총선 결과 MPLA(앙골라인민해방운동)가 총 유효투표의 61.07%(총 220석중 150석)를 획득하여 여당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2010년 1월 개정된 헌법*에 의거, 주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수 국방장관이 제3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9월 26일 취임하고 9월 30일 부분 개각을 실시하였음.

*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도입함으로써 각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확보 및 공천 리스트상 제1순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대통령 임기를 기존 5년, 연임 제한 없음에서 5년, 1회 연임 가능으로 제한을 두었음.

- 로렌수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 효율성 증대, △지역 균형발전, △경제다변화 추구, △부정부패 척결, △빈곤 퇴치 등을 강조하였고, 외교 장관 포함 총 19개 부처의 장관 교체, 7개 부처의 명칭 변경 및 신설 등 개각을 단행함.

□ 현 여당인 MPLA가 장기집권 중이나 반대세력의 비판에 따른 불안요소 잠재

- 1979년부터 집권한 두스 산토스 前대통령은 소련식 사회주의 노선에서 탈피,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하면서 안정적인 정국 운영과 본격적인 석유 증산에 힘입은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여 강력한 정치적 리더쉽을 보여주었으나, 2017년 2월 38년 간의 장기집권을 마치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MPLA는 로렌수 국방장관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결정하였음.

- 최근 재정난에 따른 공무원 급여 지급 지연, 대통령의 부정축재 혐의, 인권 탄압 등으로 인해 반대세력의 불만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면서 집권당인 MPLA의 의석수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정권 안정에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MPLA 총선 득표수 추이 : 81.6% / 191석('08) → 71.8% / 175석('12) → 61.1% / 150석('17)

<표 1> 주요 정당별 의석 분포

정당명	2008		2012		2017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	81.64	191	71.84	175	61.07	150
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합(UNITA)	10.39	16	18.66	32	26.67	51
앙골라구원을위한대단합선거연합(CASA-CE)	-	-	6.00	8	9.70	16
기타	7.97	13	3.50	5	2.56	3
합계	100	220	100	220	100	220

자료: Angola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그러나 집권당이 언론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으며, 앙골라 사회 전반에 걸쳐 내전의 재발에 대한 공포심이 뿌리 깊게 퍼져 있어 국민 대다수가 정치적 안정을 원하는 성향이 강한 편이어서 향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유혈사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대중들의 인터넷 접근이 증가하자, 앙골라 정부는 2016년 1월 검열 및 폐쇄 대상을 소셜미디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미디어 규제법을 개정한 바 있음.

□ 부정부패 만연으로 재정 및 국영기업 운영의 투명성 부족

- IMF 등 국제기구는 앙골라의 정부 재정 및 국영기업 운용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구조개혁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 만연 등으로 인해 정부 및 국영기업의 구조개혁 추진과 투명성 제고가 지연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조사,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앙골라는 2016년 176개국 중 164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에도 180개국 중 167위(투르크메니스탄과 공동)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내전으로 파괴된 인프라 복구, 난민 문제 해결 등은 미흡한 수준

-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투쟁(1961~75년)과 뒤이은 내전(1975~2002년) 등 40년 이상 지속된 전쟁으로 대부분 파괴된 사회기반시설의 완전한 복구가 지연되고 있음. 아울러 내전 종료 후 주변국으로부터 귀국한 난민 110여만 명, 이재민 300여만 명 등에 대한 안정대책도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지적됨.
 - 도로 인프라의 경우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수도 루안다를 중심으로 각 지방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5만 1,429km 규모의 도로망 보수 및 건설을 추진 중이나, 대부분의 도로가 비포장 상태이며 내전과 홍수로 인해 낙후된 상태임(도로포장률 10% 수준).
 - 장기간의 내전으로 인해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유입되는 막대한 오일머니의 혜택은 일부 엘리트 계층만이 누리고 있어 앙골라 국민의 약 70%가 하루 2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
- 내전 기간 중 반군이 앙골라 전역에 600만 개 이상의 지뢰를 매설한 이후, UN의 주도하에 진행된 광범위한 지뢰제거 작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만여 개의 지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국제기구인 “대인지뢰 및 집속탄 감시단”(Landmine & Cluster Munition Monitor)의 자료에 따르면, 앙골라는 전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나라로 인구 200명당 1명이 지뢰 피해자이며, 현재도 지뢰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

□ 반정부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갈등 심화

- 2013년 11월 과거 반군 조직이자 현재 제1야당인 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합(UNITA)의 주도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자, 정부는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 120여 명이 구금된 바 있음.
- 한편, 2016년 3월에는 민주화 운동 지침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법원이 사회운동가 17명에 대해 국가 전복 혐의로 2~8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초래하였음.

3. 국제관계

□ 앙골라, 아프리카 내 중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

- 앙골라 내전이 종료된 2002년 이후 중국은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앙골라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고 앙골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앙골라산 원유를 대거 수입함에 따라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
- 중국은 앙골라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1단계 사업으로 50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여 수년 간 도로·항만·철도·학교·병원 건설 등 사회 인프라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바 있으며 제2단계 사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농업 분야를 선정, 내전으로 황폐해진 농업기반을 복원토록 추가 차관을 제공하였음.
- * 중국의 대 앙골라 지원은 대부분 중국수출입은행, 중국국제기금, 중국국가개발은행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중국 기업들이 건설계약을 수주하는 형태임.

□ 콩고민주공화국과의 국경 분쟁 및 외교적 갈등 상존

- 앙골라와 2,400km 이상의 국경선을 공유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은 2013년 자국 영해 내 해상유전(면적 약 4,000km²)에서 앙골라가 일일 50만 배럴의 원유를 채굴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앙골라 정부에 해양경계 관련 회담 개최를 공식 요청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세 불안으로 하루 약 300~400명에 달하는 콩고 피난민들이 앙골라 룬다노르테 지역으로 유입해오고 있는 바, 앙골라 정부는 해당 난민 유입에 따른 국내 정세 불안 가능성에 유의하면서도 UNICEF, UNHCR 및 국내 NGO 단체들과 협력하여 난민촌 설치 및 각종 물자와 인도적 지원을 실시중임.
- 로렌수 신임 대통령은 앙골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의 불안정한 정세에 우려하며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속하고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국가 안정을 되찾아 아프리카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함으로써 난민 유입 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임.

□ 미국과 전략적 우호협력 관계 강화

- 냉전시대 미국은 앙골라의 친소련 정부와 군사적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석유메이저들에 의한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분야에서의 제한적인 협력관계는 유지해 옴.
- 특히 2009년 5월 두스 안요스 외교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경제위기 극복 지원 및 군사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무역 및 투자협정 등에 서명함으로써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 로렌수 신임 대통령은 국방장관 시절인 2017년 5월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앙골라·미국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국제기구 앞 채무재조정 및 구제금융 요청 경험 보유

- 앙골라는 과거 수차례의 채무재조정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후 오일머니 유입을 바탕으로 2006년 12월 및 200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파리클럽에 23억 달러의 채무연체액을 상환하는 등 외채구조를 개선하였음.
- 2009년 이후 IMF로부터 공공투자 방식 개선, 관세청 시스템 개선, 부가세 도입, 지출예산 최소화 등 4개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으며, 부채 대부분을 상환하였음.
 - 2017년 2월 앙골라 재무부는 2009년 이후 IMF로부터 빌린 차입금 중 14억 달러를 상환하였으며, 현재 최종 상환까지 약 200만 달러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다고 발표함.
- 앙골라 정부는 2016년 4월 재정적자 심화 및 따른 외채상환부담 가중으로 2009년*에 이어 IMF에 1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하였으나, IMF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6월에 본 요청을 취소하였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들, 앙골라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앙골라의 저유가 추세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2016년 ~ 2017년 동안 동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17.6)	6등급 (2016.6)
Moody's	B2 (2017.10)	B1 (2016.4)
Fitch	B (2016.9)	B+ (2015.9)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 1. 6 (북한과는 1976. 4. 15 수교)

- 앙골라 정부의 친북정책으로 국교 수립이 실현되지 못하다가 1991년 5월말 친소 정부군(MPLA)과 미국의 지원을 받던 반정부군(UNITA) 간의 휴전이 성립된 후인 1992년 1월 6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음.

□ 주요협정: 경제과학기술 협력협정('93),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0), 외교관 및 관용여권소지자 사증면제협정('09), 한-앙골라 보훈·국방협력 양해각서('17)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7년 말 기준 15건, 12,661천 달러(누계기준)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

- 2017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5.4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선박해양구조물, 자동차, 석유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LPG, 동(銅)제품 등임.

<표 4> 한·앙골라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1,859	553	339	선박해양구조물, 자동차, 석유제품
수 입	143	174	198	원유, LPG, 동(銅)제품
교역규모	2,002	727	537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앙골라 경제는 지난 10여 년 간 고유가에 따른 석유수출 호조에 힘입어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였음. 그러나 2012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반전되며 성장률이 지속 둔화되어 2016년에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국제유가 회복세의 영향으로 1.5%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유가 하락, 원유 생산량 감소 등 석유 산업 부진에 따른 재정수입 및 수출 감소로 인해 재정·경상수지가 각각 2013년, 201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쌍둥이 적자를 기록 중이며, 이러한 추세는 2018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1979년부터 장기집권 중인 MPLA이 2017년 8월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로렌수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나, 정부의 부정부패와 언론 탄압 및 시민사회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 MPLA의 의석수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쌍둥이 적자 보전과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총외채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말 414억 달러(GDP의 43.2%)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448억 달러(GDP의 36.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4월 재정난 및 통화가치 급락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점, 2018년 1월 관리변동환율제 시행 후 관자화 가치가 약 27%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동국의 외채상환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책임조사역 김희원 (☎02-6255-5720)
E-mail : kheewon@koreaexim.go.kr